

“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비핵평화의 길 ”

- 일시: 2018년 6월 19일(화) 15:00-17:30
- 장소: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국제회의실(16동 349호)

프로그램

패 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 회 자	김성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일 정	15:00-16:00	<제1부> 북미정상회담 평가
	16:00-16:20	휴식
	16:20-17:30	<제2부> 비핵화- 평화체제 이행 전망과 한국의 역할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반도 비핵평화, 다시 협상의 길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 '전쟁'에서 '새로운 관계'로 전환을 합의하다
 - 지속적·안정적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
 - '말'이 '행동'으로 가기 위해 과정을 다시 시작

- 양 측의 회담 동기가 무엇일까
 - 김정은 : 1) 제재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 방편?
2) 개혁개방과 국제사회 진입위한 비핵화 시도?
 - 트럼프 : 1) 국내정치 난국 돌파위한 이벤트 기획?
2) 핵확산 방지와 국제평화 업적위한 성취 의욕?

- 한·미 합동군사 훈련(8월 UFG) 일시 중단을 출발점으로
 - 북한 : 우선 핵 신고 후 검증체계 협상 개시
 - 미국 : 대북 제재 부분적 해제 후 수교 협상 개시
 - 한·미의 선행 조치와 북한의 후속 조치 이행으로 진정성 확인

-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의 성격상 단기해법은 어렵다
 - 북·미 정상회담 성과 : 트럼프가 '단계적 해법'의 불가피성 인식
 - 상호 행동의 동기화 과제 : 매 단계별로 누가 먼저?
 -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역학관계가 주요 변수: 미국 정치 양극화

○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안전 보장’이 무엇인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 핵 폐기는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 수준 비례
- 전술핵 배치와 핵 운반수단 접근 금지 + 장거리 미사일 불사용
- 분명한 정의보다 탄력적 협상 구사에 활용

(안전 보장)

- ‘안전보장’은 러시아어의 bezopasnost(총체적 안전)에 해당
-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인권거론도 안전 저해 요인
- 전 지역의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철저한(intrusive) 검증 반대
(체제 안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 북핵 문제의 미국 국내 정쟁화를 막아야

-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그룹이 미·북 협상에 제동
- 미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가 배경
- ‘동맹’ 한국의 초당적 대미 외교로 극복 시도

○ 국내 통합이 우선이다

- 정부 : 대북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다른 문제에서 야당과 타협
대북 정책의 국내 정치 활용 욕구 자제
- 야당 : 일정 기간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경과 주시
비핵화 구체 진전 실패 시, 정부의 책임 추궁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1. 한반도 냉전종식 관점에서 본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30년의 역사

-한반도 냉전은 관련 당사국간(남 북 미 중 소)의 이념적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대결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은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많은 요소들이 탈냉전으로 전환됐으나, 그 핵심과제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즉 1988년 7.7선언에서 남북한과 관계국간의 교차승인을 제기했고, 한국은 중·소와 수교했으며 적대관계를 해소했다. 미국과 북한은 1988년 12월 외교관 접촉을 시작하였는바, 그때의 의제는 관계정상화 문제와 핵개발 의혹 해소였다. 양자 간 여러 형태의 외교적 노력이 거듭 진행되어 왔지만 그 의제와 입장은 계속됐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은 그러한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노력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회담을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2018.6.12.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 이것이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최종 관문이 될지, 아니면 아직도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 지리한 과정의 시작이 될지 불분명하다.

○ 7.7선언: 4강 교차승인 추진

- 1980년대 말 국제냉전이 이완되는 정세가 완연했다. 우리 정부는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노력을 추진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

의 이면에는 1988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4회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필요성도 작용했다. 서울 올림픽은 1980년, 1984년 두 번의 반쪽 대회를 극복하고 온전한 대회로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당시 정부로서는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국내 민주화 조치와 더불어 북한 및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1988년 7월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발표했다.

- '7.7선언'의 요지는 대북한 문호개방과 주변 4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제안이다. 서울올림픽이후 동구 국가들이 체제를 전환하고 국제냉전질서가 종식되었으며, 우리는 한·중, 한·소 수교 등 우리와 적대하던 공산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이룩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써 교차승인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한반도 냉전종식의 구상이 미완의 과제로 남게됐다.
- 또한 '7.7선언'을 기초로 1989년 9월 정부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북한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1990년 남북한 간 교류 협력을 개방하고 합법화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했다. 북한과는 1988년 12월부터 대화를 시작하여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남북한 간에는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와 평화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 핵 **상호사찰과 검증문제를 합의하지 못했고**, 북한의 NPT탈퇴로 인해 남북한 관계는 화해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초기접근: 핵개발 의혹 해소와 관계정상화 문제

- 미국과 북한은 1988년 12월 북경에서 참사관급 외교관 접촉을 시작했다. 이때 북한은 관계정상화를 제기했고, 미국은 핵개발 의혹해소를 요구했다. 이때 제기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고, 핵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접촉의 수준은 정상급으로까지 격상됐다.
- 북한은 1992년 1월 김용순 당 국제부장을 미국에 파견했고, 김용순은 뉴욕에서 미국의 A. 캔터 국무차관과 회담했다. 북한은 이때 관계정상화를 요구

기रो에 선 한반도 Ⅲ

하면서 주한미군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은 핵개발 의혹 해소를 요구했으며 북한은 곧바로 IAEA 안전조치 협정에 가입하고 이 협정에 따른 최초 보고서를 제출했다. 북한이 제출한 보고내용과 IAEA 사찰(시료채취) 내용 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됐다. IAEA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NPT에서 탈퇴했다. 이로써 1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다.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미북 간 직접대화를 개최하였다.

- 미북관계 진전이 어렵게 되면서 남북관계도 동력을 잃었다. 1차 핵위기의 원인은 **사찰과 검증 문제**였다.

○ 제네바 기본합의: 단계적 핵문제 해결과 단계적 관계 정상화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여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이를 대체할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해체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경제제재 해제와 연락사무소 설치를 비롯한 초기 신뢰구축 조치를 시작으로 하여 양측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아가기로 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보장(NSA)을 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개발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제네바 기본합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경수로 제공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졌다. 결국, 미국의 부시 정부가 2001년 6월 제네바 합의의 이행개선, 즉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기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제네바 합의는 동력을 상실했다. 거기다 북한이 2002년 10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실재를 인정함으로써 제네바 기본합의가 파기됐다.

-제네바 합의도 기본적으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로 인해 파기됐다.

○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미북관계 정상화 병행 추진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조하여 페리프로세스를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냉전종식 과제는 7.7선언과 일관성을 갖는다. 즉 남북한 관계 개선, 미북관계 정상화,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개방, 대량살상무기 위협 해소와 군사적 신뢰구축,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5대 과제를 제시했다(1999. 5. 5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2000년 6월 남북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후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경제협력의 확대, 대규모 식량지원 등을 통해 남북한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남북한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미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 주선했다.

-북한은 2000년 10월 조명록을 김정일의 특사로 파견하여 미국과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공동선언에서는 ①미국과 북한이 적대의사를 가지지 않으며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며, ②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결하며, ③제네바 기본합의의 원칙에 따라 신뢰를 구축하고 주요 관심을 건설적으로 추구하고, ④호혜적 경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⑤북한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며, ⑥인도적 지원과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 후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과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하였으나 미사일 협상의 미진과 미국의 국내사정으로 미북 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그 후 부시 정부는 북한의 비밀핵개발 의혹과 제네바 합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고 대처함으로써 북미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 9.19공동성명: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005년 9월 남북미중일러 등 6자회담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미국 일본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5자는 북한에 대하여 경제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로서 2007년 2.13 합의를 체결했으나 **사찰 검증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9.19 공동성명은 파기되었다.

-이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은 열리지 않았으며, 북한은 그후 연이어 핵실험을 했고, 6차 핵실험에서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으며, ICBM 까지 발사하여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2017.11.29. 12.12)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2016년부터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본격 협조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했으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 30년의 협상과정을 볼 때 미북정상회담은 당연히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핵심의제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비핵화는 철저한 검증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이었다.

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정상회담 전에 제시된 비핵화의 기준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불가피하게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라는 30년의 의제를 그대로 재현하는 회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각 당사자가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미국: 미국은 회담 전날까지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이 얻고자 하는 유일한 목표는 CVID 임을 강조하고, 특히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검증부분을 강조하였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은 회담 전날까지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북한과 합의를 강력하게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남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선언에서 북한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했고, 2017년 8.15 경축사를 통해서 군사적 옹

선을 반대했다.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4.29일 전화통화를 한 후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회담이 열리기 며칠 전까지도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남북미 3국정상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바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번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북한은 지난 3월 5일 정의용 특사를 만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비핵화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핵문제 발생이후 계속 견지해온 북한의 입장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김정은은 집권이후 비핵화는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번에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하며 동등한 상대로서 존중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3월 26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동시적 행동조치를 통한 비핵화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담화에 대한 5.25일 김계관 담화에서는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가지 씩이라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지금보다는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 빠지지 않는다.” 즉 북한은 여전히 핵문제를 초기부터 일괄적으로 타결할 생각이 없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신문의 6월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회담의제에 관해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미수뇌회담에서는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이 교환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되풀이 했다.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신뢰구축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이다. 이는 미국이 추구했던 핵문제 해결을 통한 신뢰구축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2016년 3월부터 일관되게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주장했다.(2017.7.4.부터는 중·러의 공동입장).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미북정상회담이 합의되자 북한과 급속히 접근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배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의 후원자로서 입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장기적인 과제로 구상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 개입하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것은 미국과의 세력 경쟁과 관련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신뢰구축과 관계개선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초기 진입단계 정도로 생각한 것 같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에 합의할 것을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많은 전문가들은 4.27에서 비핵화의 목표를 확인한 만큼 6.12 싱가포르에서는 그 행동조치로서 CVID원칙에 합의하고 그 실행방안이 일괄타결 방식으로도 합의할 것을 기대했다. 더 적극적인 기대는 CVID 개념에 대한 동의, 비핵화 경로와 시한 설정, 중대한 의미가 있는 비핵화 초기조치 실행, 철저한 신고와 사찰 규정의 합의를 기대했다. 4.27 정도의 원칙적 합의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없었다.

○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미북간 싱가포르 정상회담(6.12)에서는 ①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②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③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④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등 4개항이 합의됐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내용상 2000년 10월 미북공동성명과 거의 같다.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에서 타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2000년 합의수준에서 봉합한 것 같다. 그때는 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들어가 있어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다. 이번 합의에서는 2000년 합의했던 경제 교류와 협력, 인도적 지원이 빠졌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도 그 구조가 유사하다(①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관계 개선과 발전, 10.4선언 이행, ②군사적 긴

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즉 군사연습 중단, ③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 외견상 논리구조로만 보면 관계개선을 통한 비핵화로 읽을 수 있으며, 남북미 3자가 이에 합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구조는 북한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해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장차 감축 내지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비핵화 시점은 금방 다가올 것이며, 비핵화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시작하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 비핵화는 검증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미국과 다른 주체가 조합하여 검증할 것이다, 비핵화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돕는다, 미국은 돕지 않는다, 핵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될 때까지는 제재는 계속된다. 북한은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폐쇄한다. 평화협정에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한다 등을 밝혔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제재를 해제한다고 약속했으며, 쌍방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조치를 준수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 한반도 문제 해법의 재규정

-이번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행동조치에 합의할 것이라거나 최소한 CVID 원칙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빛나갔다. 그동안 한미 당국이 언급한 것이나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에 미달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는 기대는 일단 무산됐으며, 향후 추가 협상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북한이 사상 최고로 중대한 외교적 과제라고 할 수 있었던 최초의 미북정상 회담을 앞두고도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바, 북핵문제 해

결이 쉽지 않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과제인 관계개선과 핵문제 해결의 해법으로서 병행해법이(제네바 합의) 실패한 이후, 사실상 선 핵문제 해결 해법(9.19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그 해법도 파기되고, 이제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 평화를 통한 북핵 관리 내지 해결'로 바뀐 듯하다. 이를 6.13 북한 중앙통신이 확인해 주고 있다. 이는 북한이 꾸준히 주장해 왔던 해법으로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를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게 됐다. 따라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한 합의로 평가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6.13일 서울 방문시 북핵정책의 ①CVID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며, ②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하며, ③2020년 중반까지 비핵화의 중요한 부분을 완료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이 세 가지가 미북 간 사전협상에서 핵심쟁점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마지막까지 이러한 입장을 공동성명에 넣고자 노력한 것 같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먼저 안전보장과 정치적 신뢰행동을 취하고, 북한은 이에 대한 선의의 조치로 비핵화를 추진하는 구조를 용인했다. 이는 선 비핵화 및 압박과 검증을 통한 비핵화를 추구했던 전통적 방식을 벗어난 것이며, 이를 트럼프식 해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바, 이것은 그동안 쌍중단을 요구해 온 중국의 해법이 적용된 것이며, 중국은 자신이 제기한 해법이 현실에 부합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바(6.13 인민일보), 앞으로 쌍궤병행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할 것이며 전반적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은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최대의 압박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했으며, 북한을 정상국가로 대우하는 상황에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며, 이미 제재의 90%를 담당하는 중국이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북중국경의 현장에서는 제재가 이완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의 변화

-북한이 정상국가의 위상을 확보했다.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 국가인 미국의 지도자가 불량국가 폭압국가의 독재자로 규정했던 김정은 위원장을 동등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대접하였으며, 훌륭하고 유능하다고 칭송함으로써 김정은의 대내적 정통성을 강화시켜주고, 국제사회에서는 잠정적으로 핵을 가진 정상국가로서 행동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 중단을 통해 북한이 제기했던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체제안전과 발전을 보장한다고까지 언급했다. 또한 북한은 미북정상회담을 지렛대로 하여 중국과의 순치관계를 회복하고 외교력을 강화하였으며, 경제제재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한반도 국제정치를 보면 핵을 가진 세 당사자가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은 현실주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피하다. 이 당사자들은 북핵문제의 현실적 절충을 추구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핵군축 회담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중국은 쌍궤병행을 주장했다. 미국은 이에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따라가고 있다. 이러한 협상구조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북핵을 묵인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핵제조 기술을 익히고 있기 때문에 핵의 완전한 폐기, 핵능력의 불가역적 폐기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비핵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위상과 발언권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한미 간에 전략적 이익을 보는 입장차이를 표출한 바 있고, 미국과 북한 간 관계개선이 진행된다면 한미동맹관계는 이완될 가능성이 있다. 핵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 정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언권이 약화될 소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국익을 지킬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미동맹관계에 의해 대북억제력을 유지해온 우리로서는 미북관계가 개선되면 불가피하게 대북억제력으로서의 한미동맹관계의 역할이 변하게 되고, 미국입장에서 동맹의 파트너로서 한국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게 된다. 트럼프가 한미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고, 주한미군의 존립을 뒷받침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용이 많이 들고 도발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은 기존 안보질서가 변화될 가

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비가 부족하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안보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면 남북한 간 힘의 균형이 기울어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 북한 정권의 부담과 위협

-북한은 신뢰구축을 통한 비핵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군사적 위협과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비핵화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서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정상적인 지도자로 존중해줬고, 일단 군사적 안전보장 조치와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선 신뢰구축 조치를 취했다. 이제 북한이 스스로 주장해 왔던 바에 따른다면,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먼저 선의의 조치를 취한바 이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선의의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한 압박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후에 보자고 한 것은 의미심장한 말이다. 신뢰한다고 하지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제재, 관계정상화 조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따라 6.12이후 조성된 정세가 지속될지 여부가 좌우될 것이다.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에는 외부 적대세력이 있다. 미국은 악의 근원이었으며 최대의 적이였다. 이것을 국내통제와 억압, 빈곤을 정당화하는데 활용했다. 이제는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개했던 정책의 명분과 선전선동이 무의미해졌다. 내부 체제를 통제하는 데에는 유리해 졌다고 할 수 없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남북교류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유입과 사회의 이완현상을 다잡는 데에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정상국가로서 대우해 주었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 국제규범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3. 제기되는 과제들

○ 비핵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제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는 핵이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장기집권을 해야 하는데 핵개발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 것은 장기집권에 불리한 환경이다. 특히, 미·중이 타협하여 북한의 권력교체에 나서게 된다면 치명적이다.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김정은은 김정일에 비해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 김정일 때에는 국제냉전 붕괴이후 내부 체제붕괴 위기감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유보하면서까지 체제유지 수단으로서 핵보유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였다. 그 때는 핵보유가 목적이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경제가 돌아가고 북한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중국의 부상 등 외부환경도 좋아져서 체제붕괴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자체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 김정일 시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2016년 5월 7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체제가 승리했다고 선언한 것은 이러한 정세판단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의 전략은 경제를 살려서 김정은의 장기집권의 안정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보자. 이것이 4.20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당의 새로운 전략노선이라고 제시됐다.

-이를 위해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조건이 맞으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바의 해법에 합의한 것이다.

-북한은 핵과 ICBM을 과학적 방법으로 개발하고 시험하고 검증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폐기하더라도 언제든지 핵이 필요할 때에는 단시간 내에 다시 제작 가능하다. CVID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검증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의 전략은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रो에 선 한반도 Ⅲ

연합훈련 중지, 전략무기 전개 제한, 한반도 주변 비핵화, 핵우산 등 무어라도 해야 한다. 미사일은 의제화 할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나 장래 한민족 전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 종전선언

-종전은 전쟁상태를 종결시킨다는 것이므로 그 주체는 전쟁에 참여했던 실질적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남북미중 4자가 할 필요가 있다. 4자가 참여하는 것이 6.25전쟁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종전선언을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평화협정에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원래 종전선언은 강화조약, 평화협정의 첫 파트를 구성한다. 그리고 실질적 종전상태에서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실질적 종전이 아닌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은 불가침을 의미할 것이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이 종전을 선언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종전상태를 확인하자는 의미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핵문제 해결과 관계정상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

-다만 한반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유일한 규정이 정전협정인데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한반도를 어느 규정으로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 종전선언과 분리된 평화체제 구축

-평화협정이 상호관계를 재규정하고 미래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전선언이 분리되면, 4자 협정보다는 관련 당사자들이 양자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이 좋다.

-한중간에는 수교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평화협정이 필요 없다.

-북미 간에는 명칭이 무엇이든 상호 관계정상화(수교)와 필요하다면 불가침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미북 양자 간에 남한이 관련되는 한반도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다. 평화협정의 명칭을 쓴다하더

라도 전통적 의미의 평화협정은 아니다.

-평화협정의 핵심적 사항인 향후 한반도 안보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사명은 남북한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장래 문제를 결정하는데 미국이든 중국이든 개입할 수 있는 지분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러한 차원에서 4자 평화협정은 좋지 않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2+2 형식에 미중은 보증자 수준에 그치게 해야 한다.

-남북한 간 평화상태 유지, 군사적 신뢰구축, 군축, 경계선 관리 등을 남북한이 책임지도록 한다. 여기에 유엔 안보리가 구성하는 평화감시군 정도를 파견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 평화협정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상호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평화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안보체제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

평화체제 수립 시 제기될 UNC 장래, 한미연합사와 한미일 군사협력, 특히 일본 후방기지 사용 문제, 경계선의 변화 등 안보상의 중대한 변화가 온다는 점에서 핵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 통일 지향적 남북한 관계 설정

-향후 한반도 정치에서 한반도 영구분단의 빌미를 주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남북한 간 합의나 국제적 합의에서, 우리의 헌법이나 법률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포기하는 듯한 언사를 쓰거나 규정을 두는 것을 경계한다. 남북한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이다. 편의적으로 한반도 2개국가론을 주장하는 것도 경계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을 증가시키는 사태를 배척한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국익이 우선이다. 지금 주변국들은 한반도 정치에 개입하여 자기 몫을 챙기고자 한다. 그들에게서 한민족과 국제정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민족자결권은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한반도와 한민족의 장래는 한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기रो에 선 한반도 Ⅲ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주변 강국들의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이다. 우리는 주변국들에게 한반도의 통일이나 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지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안보상황에 대한 근본적 검토

-현재 한미 간, 남북한 간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변화가 진행될 것 같다. 이러한 검토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즉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떠한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객관적으로는 평화가 정착되어 전쟁이 불가능한데 우리의 인식은 평화상태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안보불안에 빠져있는지? 아니면 안보상황이 불안정한데 우리의 인식은 평화상태라고 규정하고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는지?

북한의 핵이 사실상 무용지물인데 이를 우리는 과도하게 위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핵이 대단히 급박한 위협인데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북핵평화가 가능한지?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의 안보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상황과 지정학적 전략적 위상은 어떠할지? 주한미군이 없을 때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우리의 자주국방능력은 어느 수준이고 그러한 결의가 있는지? 그동안의 핵 등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만 맡겨두고 자주국방의 태세를 갖추지 못한 데 대한 반성.

북미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의 기술적 과제

이 춘 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과거 북핵 협상의 다양한 측면

1) 협상 사례

- 제네바 합의(1994) : 최초 핵 협상 타결
 - 내용 : 1단계 핵 동결, 경수로 건설 이후 핵 폐기
 - 문제 : 2002년 우라늄 농축 의혹 제기, 경수로 공사 중단
- 9.19공동성명(2005) : 포괄적 접근, 병행적 해결(<=선택 폐기), 단계적 접근
 - 내용 : 핵무기/프로그램 폐기, 외교 정상화, 에너지/경제지원, 평화체제
 - 문제 : BDA 문제, 2006년 10월 핵실험
- 2.13합의(2007) : BDA 문제 해결, 6자회담 재개
 - 내용 :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2007), 2단계 불능화, 냉각탑 폭파(2008.6)
 - 문제 : 시료채취(HEU) 회피, 2009년 로켓 발사(4월) 및 핵실험(6월)

<표 1> 주요 핵 관련시설과 과거 사찰 대상 (자료 : 안진수(2011)에서 일부 수정)

종류	시설명	소재	가동 현황	1994년 동결	2007년 불능화
채광 및 정련	평산 우라늄광산	황해 평산	운영 중		
	순천 우라늄광산	평남 순천	운영 중		
	평산 우라늄정련시설	평산	운영 중		
	박천 우라늄정련시설	평남 박천	가동중지('92)		
원자로	IRT-2000 연구로	평북 영변	운영 중		
	5MWe 흑연로	영변	운영 중	○	○
	50MWe 흑연로	영변	건설 중지	○	
	200MWe 흑연로	태천	건설중지	○	
핵연료 생산	100 MWth경수로	영변	건설 중		
	핵연료봉 제조 시설	영변	시설 재건	○	○
재처리	농축 시설 (원심분리기 4,000개?)	영변	가동 중		
	방사화학실험실	영변	운영 중	○	○
연구	동위원소가공시설	영변			
핵무기	핵 실험장	함북 길주	폐쇄		

2) 문제(IAEA 기준) : 신고와 검증의 괴리

-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북한이 추가 검증시 미국을 의심하고, CVID는 패전국에나 적용되는 거라며 완강히 거부
 - 다국 협상에서의 이견 조정과 타결을 위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이로 인한 이견 노출, 북한의 검증 회피, 제재의 타당성 결여 노출
-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 프로그램(북한측 신고만으로 검증)을 추진하면서, 중도에 신고 내용의 신뢰성, 정확성 문제 부상
 - 단계적 접근(1단계 동결, 2단계 핵무기 해체와 핵물질 반출, 3단계 핵시설 해체와 폐기)에서 후속단계 이행 지연, 북한의 시간 벌기와 제재 회피
- 우라늄 농축 등 북한이 신고하지 않았으나 의심스러운 사항의 검증 거부 및 금창리 동굴 검증 후의 책임 문제 대두
 - Pu는 가동 이력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검증이 가능하지만, HEU는 가동 초기부터 감시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사후 검증이 거의 불가능

2. 북미 정상회담 합의와 기술적 논의

1) 합의문

- 북미정상회담 : 3. 2018년 4월27일 남북한 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 판문점선언 : 3.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 CVID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남한 농축/재처리와 관계있는 I가 희석되고 V는 미국의 핵심관심사(ICBM, HEU 등)에 집중(?)
 - 트럼프의 “비핵화가 20%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라는 언급의 기준과 내용 확인 필요
- 북미가 2년 반(2020년 말)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여기에 집중하면, 신고-검증-사찰-분석-폐기 순서가 흐트러질 가능성
 - 포괄적인 검증 없이 체제/경제 보상이 부여되면, 후반부의 철저하고 세부적인 검증은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

기रो에 선 한반도 Ⅲ

- 8월 한미훈련 중단에 대한 북한의 조치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내역을 보면서 판단해야 함.
 -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와 최근 언급되는 ICBM 관련 설비 폐기 등의 선도적 조치들도 주시

2)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사례

- 당 대회에서 폐기를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폭파
 - 사용이 만료된 2번 갱도 뿐 아니라 미래 전술/전략핵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3번, 4번 갱도까지 폭파
- 다만, 전문가 사전검증과 시료채취 없이 기자단 참관만으로 폭파가 진행되어 은폐, 보여주기 논란 발생
 - 주요 논란 : 폐쇄 방법/의미, 완전/부분파괴, 방사선(후속관리), 실험장 임무 종료(시뮬레이션 등으로 대체), 국가간 인식/참여도 차이 등

3) ICBM과 관련설비 폐기 논의

- 서해발사장(동창리) : 발사대(연속식, 우주발사 겸용), 기술지원동, 엔진시험장, 측정, 통신
 - 엔진시험장 폐기 : 기존 엔진의 신뢰성 향상과 차기 엔진 개발, 우주발사용 엔진개발 중단 의미
- 후속 조치 : 이동식 발사대(TEL), 운용부대 및 설비, 동해발사장(무수단리, 회분식), 고체엔진 시험장, SLBM 발사대
 - 단거리/단중거리 미사일(?) : 한국, 일본

3. 향후 과제

1) 주요 검증 대상과 난제 확대에 대비

- 과거에 비해 북한 핵 프로그램과 검증 항목들이 크게 증가하고 검증기술도 발전하고 있으므로, 분야별로 세부 항목을 점검할 필요
 - 시설과 핵물질, 탄두 외에 관련 기술과 자료, 인력, 연구개발 프로그램 등도 파악 : 사회주의 개발경로 추적과 러/중 등과의 비교

- 플루토늄(Pu) 생산 설비 : 설비 노화로 중요성이 줄었으나, 불능화 복귀 이후의 활동과 삼중수소 생산 여부 검증
 - 우라늄 농축(HEU) 설비 : 영변 이외 지역 공장과 연구소(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와 중간시험공장 등), 관련 설비 파악
- 핵무기 개발, 생산공장, 실험장 : 핵물질(Pu, HEU 등)의 경우, 원자로와 원심분리공장 외에 핵탄두와 핵무기 생산시설 보유분, 실험 사용량 확인
 - 수소탄 : 리튬6(Li⁶)와 중수소(D), 삼중수소(T) 등의 핵융합 관련 물질 생산 설비와 생산량, 현 보유량 등을 파악

2) 주요 논쟁 가능성 파악

- HEU 프로그램 검증 : 기술 수준, 설비 규모, 누적생산량 등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긴 시간의 치열한 검증을 필요로 함
 - 국방 관련기관 외에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수학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전자재료연구소 등의 민간 연구기관과 기업/설비/인력들도 개입
 - ※ 사회주의 연구개발체제와 군민 연계, 행정관리체제와 연구관리체제...
- HEU 논란 : HEU가 신고, 검증, 반출 과정에서 핵심 문제가 되고, 신고 내용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커다란 논란/여론분열이 발생할 가능성
 - 원심분리기 생산능력/, 수출통제 품목과 주요 제공국, 설비 은폐, 가동 시기와 가동율, 농축도, 생산 총량, 핵실험 사용 여부와 사용량, 검증...
- 시기/단계 구분 : 신고/사찰/검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핵물질/무기 반출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추진(북미 정상회담의 이슈)
 -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반출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도 조기에 제공(전부/일부, 일시/단계)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입장차 발생 가능성
- 국제협상과 남북협상 : 핵무기와 농축, 재처리 등 우리가 하지 않는 분야의 협상 배재, 주도권과 내용 결정, 경비 분담 등에서의 소외 가능성
 - 대북 지원, 북한 핵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피해/위협, 우리가 포기한 것(농축, 재처리) 등과의 등가성 논쟁 가능성

3) 한국의 역할과 준비

- 비핵화 순서가 과거와 다르게 추진(핵물질, 탄두 조기반출과 ICBM 파괴 등)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 단계/시기별 로드맵을 짜야 함.
 -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 규정과 북/미/중/러의 입장 등을 정리하고, 이를 비핵화 기술적 조치 및 대북한 보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 비핵화 소요경비(사찰, 검증, 분석, 폐기, 반출 등)와 단계적 비핵화에 따른 지원 내역을 정리하고 남북한 경제협력과도 연계
 - 국내외(특히 북한, 미국) 공조를 통해 비핵화 진전에 대한 기술적 판단 기준(지표)을 선정하고 점검하며, 이의 전문적/종합적 조정체계를 구축
 - ※ NSC, 외교부 북핵기획단 등의 전문성 강화와 정보공유/공조 확대
- 비핵화 관련 국내 전문가/설비/약품을 파악/보완해 실무조직과 검증단 구성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핵심 분과 장악 및 우리측 인력 확대 추진
 - 미국 등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민군 연합 차원의 전문성 심화/확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